

안 장고 모드에 탈당·분당說 난무

호남의원들 내일 회동...비주류, 안에 '문·안·박' 거부 압박 文, 이틀째 자택서 돌파구 모색...오늘 문화전당 개관식 참석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조문정국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제안에 대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 각 계파에서 긴박한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동 지도부 성사 여부는 당의 내년 총선 체제 전환의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 주류와 비주류 진영에서는 안 전 공동대표의 결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공동 지도부 체제 성사의 키를 쥐고 있는 안 전 공동대표는 "주류 분들과 더 상의하겠다"며 '장고'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 주류와 비주류, 중도 진영에서는 안 전 대표와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안 전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는 탈당설, 분당설 등 각종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열리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회동은 안 전 대표의 결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성곤, 강기정, 우윤근, 박민수, 김윤덕 의원 등 친노 및 주류 성향 의원들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회동에서는 문·안·박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장고'에 들어갔다면 문 대표가 '침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감기 몸살 등을 이유로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구가동 자택에 머물렀다. 문 대표

는 25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개관식 행사에만 합류하기로 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문·안·박 체제 제안의 논란이 큰 상황에서 광주에서 최고위를 개최한다면 주승용 최고위원의 반발 등 당내 내분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며 최

고위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2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와 맞물려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연기했다.

문 대표의 집거는 '문·안·박' 체제 성사를 위한 고심의 연속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막판 더 진전된 메시지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 측에서는 안 전 대표가 '문·안·박 카드'를 거부한다면 '문·박 체제'로 우선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5개월 앞

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도부 문제로 주춤거리다면 속도 밟도 안 된다는 논리다.

이에 맞서 민집모(민주당집권을위한모임) 등 비주류 진영에서는 안 전 대표에게 공동지도부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측 의원은 "25일 밤 8시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안 전 대표와 만날 예정이며 문 대표의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문·안·박 결국 총선 패배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3+3 회동... "잘 해봅시다" 여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3+3 회동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3+3 회동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세월호 특조위' 불똥에 반쪽난 농해수위

與, 대통령 행정조사 반발 불참... 특조위원 17명 사퇴 요구

세월호조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여야가 24일에도 대립했다.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의결 등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반발해 여당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불참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여당은 특조위 활동 방해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최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에 대해 해 지침 문건이 공개된 것을 두고도 해수부가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진상규명 요구에 비협조적인 해양수산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교육부의 예산에 대한 '징벌적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정상적

한 심사를 방해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부처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특조위원 17명 전원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또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도 중단한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속적인 대통령 흡집 내기와 위법·위헌 행위, 비상식적 정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세월

호 조사 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는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세월호 특조위의 박 대통령 행정 조사 방침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특조위가 실제 조사를 강행할 경우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의 근거로 든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된 헌법 84조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주홍 "지역신문 지원 연장돼야"

특별법 10년 연장 법안 발의

내년에 폐지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효를 10년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교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황 의원은 "지난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 당시 250억원에 달했던 지역신문 지원 예산이 올해 100억원으로 줄었으며 아예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해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마저 폐지되면 기금 출연 근거가 사라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 후 무려 4개월이 지나야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기적으로 언론진흥기금과의 통합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현재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신문의 어려운 여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추가연장(3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법은 6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1차로 6년간 연장된 만큼 폐지가 필요하고 언론진흥기금과의 일부 유사중복사업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애초 한시법으로 제정된 법률의 취지를 감안할 때 유효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지역신문의 열악한 상황이 많이 알려진 만큼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시효를 꼭 연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료 선배 의원들과 협력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려 커지는 '빈손 국회'

여야, FTA 비준 동의·노동개혁 등 현안마다 대립각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처리 등 여당이 강조하는 현안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등 야당이 요구하는 현안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이들 정기국회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한편,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한다.

그러나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실무 회동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극심한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성과 없이 종료, 이날 원내대표 회동 전망도 매우 불투명해졌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문제에) 노력하는 기미도 안 보여줬다"며 "국가가 책임진다던 무상보육도 지방에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더해지면서 FTA 비준,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의 처리 전망도 덩달아 어두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FTA 비준안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며,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

개혁 법안도 회기 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분회의가 코앞인데, 새정치연합은 FTA 비준 동의나 국제의료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에 비협조적이라 답답하다"며 "노동개혁이 무산되면 경제 재도약도 물 건너간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이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FTA 비준 동의와 관련 "정부·여당은 시장·수출 만능주의의 맹신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무역이득공유제 등 FTA 피해보전 대책 없는 비준동의가 어렵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가 정부, 법제사법, 환경노동, 국방, 기획재정, 보건복지, 안전행정부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불과 2주일에 남은 정기국회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에 '발등의 불'이 된 내년 총선 논란이 더해지면서 FTA 비준,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의 처리 전망도 덩달아 어두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FTA 비준안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며,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